

여수 돌산 산림·갯바위 훼손, '관리·감독 제대로 했나'

여수 7개시민사회단체, 24일 시청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단체들 "산림훼손 과정서 행정 특혜 및 직무유기 확인 필요"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돌산지역의 산림 훼손과 갯바위 훼손에 대한 여수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여수시민협 등 7개 단체가 모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산지역 소미산 산림 훼손과 안골전 갯바위 훼손 의혹, 여수시의 행정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소미산의 경우 여수시가 작업로 개설을 허가해 산림 훼손을 야기했다"며 "산림 훼손이 진행되기까지 직무유기와 사업자

에 대한 행정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을 인지한 뒤 행정조치 지연과 오히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공익개발 제안에 대한 협의 및 상업 시설 건축 허가 검토 진행 여부 등 유착 의혹도 감사 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관광시설 사업자가 태풍피해 복구를 이유로 갯바위에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이를 인지했는지와 행정조치 지연여부, 감독 의무 소홀 등으로 사업자에 행정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감사가 필요하

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돌산의 한 관광업체 대표와 운영자 등 2명을 관광시설인 갯바위를 훼손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이후 두 차례 태풍으로 갯바위 위에 설치해 놓은 데크가 파도에 파손되자 9월께 복구를 위해 갯바위 일부 구간을 시멘트를 이용해 복구한 혐의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작년 4월 해안데크 설치를 위해 여수시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고, 관광객이 안

전하게 갯바위를 걸을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했다"면서 "하지만 두 차례 태풍으로 데크 50%가 훼손된 데다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면서 바다 오염과 관광객 위험이 뒤따르자 3억원을 들여 긴급 보수한 것이 콘크리트 타설로 오해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당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줬던 공무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행정 특혜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7개 여수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공익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 YMCA,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시지부로 구성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24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산 개발과 관련한 산림훼손과 갯바위 훼손 발생시 관리 감독 부실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 보전' 캠페인 행진하는 수녀들 천주교 수녀들이 24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개막 미사를 마치고 캠페인 피켓팅을 위한 '기후 행진'을 하고 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은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제안에 따라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동참하는 캠페인이다.

초교서 6학년생 후배 폭행 신고...경찰 수사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도중 6학년 학생이 3학년 후배 학생을 때려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광주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방과 후 수업 도중 6학년생 A군이 3학년생 B군을 마구 때렸다

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단축 수업으로 해당 학교는 방과 후 수업을 학년 구별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으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B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학교측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학교 측도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는데, 학교폭력 전담 관련 회의를 잇따라 열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안전속도 5030' 한달...경찰 "서울서 1만7000건 단속"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시민 동참 위해 홍보 중점"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km 이상 차량 속도를 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지난 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한달여간 서울 지역에서 1만7000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5030 제도 단속 현황과 관련해 "무인단속기를 통해 단속 중인데, (서울 기준) 한달간 1만7000여건이 단속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15% 늘어난 수준으로 전해졌다.

장 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자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km,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적용 중이다.

단, 도심부 내 소통상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시속 60km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먼저 제도를 시행한 많은 나라에서 (주행) 속도를 10km만 낮춰도 최소 20~40%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든다는 걸 확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민정기자

카페리 화물선에서 상습 차량털이, 외국인 선원 구속

목포해경, 미신고 절취품 확인...여죄 추가 조사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제주 간을 운항하는 카페리 화물선에 선적된 차량 안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외국인 선원 A씨(30)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5월16일까지 카페리 화물선 B호에 선적된 차량에서 수차례에 걸쳐 노트북 등 7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화물선 B호의 선원인 A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고 탑승자가 없는 차량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지난 10일 B호의 선내에서 도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목포해경은 선내 CCTV와 선적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17일 오후 11시50분께

목포항 용당부두로 입항한 B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했다.

해경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다량의 절취품들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카페리 화물선 및 여객선을 통해 차량 탑승 이용 시 차량 내에 귀중품은 별도 보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